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5일 (윤달 5월 12일) 수요일

## 산자부·복지부장관에 광주·전남 높은 관심

### 文대통령, 한전공대·국립심혈관센터 공약 주무부처 수장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표류 사업 새장관 '물꼬'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5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명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정치가의 관심이 높다.

이들 후보자는 최종 임명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이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사업들을 추진할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표류했던 사업에 대해 새 장관이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4일 정치권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1기 내각에 장관직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신재규 한양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사회안전망과 최저 생계비 등을 연구해온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지역민의 기대감과 함께,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직을 수행할 이들은 임명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 추진의 주무장관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상생공약이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한전공대 설립 등의 공약은 큰 틀에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을 앞두고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동안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주무부처의 정책결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10여년간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공약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 장관이 임명돼야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 사실상 등을 돌렸던 복지부 직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어 새 장관이 임명돼야 '문재인표' 국립심혈관센터를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지난 5·9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최고 공약으로 평가받은 한전공대(KEPCO) 설립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설립은 일차적으로 한전이 추진 주체지만, 한전이 산자부 산하 최대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장관의 의중 역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문대통령과 한전의 의지로 비춰볼때 산자부 장관 역시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가 무탈하게 청문

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췌 일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캠프인사라는 정치적 공세를 받고 있다.

국회 산자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원은 광주 출신 장병완의원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 장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명된 산자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그 어느 후보자들보다 높다"면서 "국립심혈관센터나 한전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의 주무 장관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한전공대는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영남권의 포항공과공대(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설립한다는 구상으로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전망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다.

주춘정 기자



### 불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 피문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단독범행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답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당시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며 '이들의 소환조사를 거기로 철저한 조사와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선거부정이 자리를 못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 및 추경과 관련해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면 6월이면 한달이 고기한도 교역 8월 말 있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모든 것을 안게시켜서 방지시켰다. 즉각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우원식



박지원



우원식

## 광주전남 농민단체 “쌀값 우선지급분 환수는 농업적폐...철폐 촉구”



4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소속 농민 40여명이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값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쌀값 폭락 책임 농민에 떠넘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농업 적폐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소속 농민 40여명은 4일 오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공공비축기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환수정책에 농민들이 반발해 납부율이 저조하자 2차 고지서를 보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가산금까지 붙여 8월말까지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쌀값 환수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려며 쓴 소리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농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아

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인사 청문회 때 김영록 농림부 장관 내정자가 국가제정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어 넘어간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농민들이 포대당 860원에 불과한 쌀값 환수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며 “환수 정책이 철폐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농업정책도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66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분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메입 가격을 4만4400원으로 결정하고 포대당 차액 860원을 환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8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남규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